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 8000만원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1억400만원으로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세금 신고한 상속재산 39.1조원… 부동산이 약 69%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9조원(29.0%), 토지가 5.0조원(18.4%)으로 부동산 비중은 47.4%에 달했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하 증여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는 63건(0.5%)으로 나타났다.